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과 시사점

2023.8.11.(금) 14:00-16:00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좌장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대통령탄생
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사회 |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발제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과 시사점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토론

김택근 작가

〈김대중 자서전〉 대표집필자,
〈새벽: 김대중 평전〉 저자

김윤형 기자

한겨레 국제부장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2023.8.11.(금) 14:00-16:00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진행 순서

사회 |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 구분 | 시간 | 연사 및 내용 |
|-------|-------------|---|
| 국민의례 | 14:00~14:05 |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 내빈 소개 | 14:05~14:08 | 주요 내빈 소개 |
| 환영사 | 14:08~14:10 |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 |
| 축사 | 14:10~14:1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상) |
| 격려사 | 14:13~14:16 | 김대중재단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
| 기념 촬영 | 14:16~14:20 | 주최 측, 발제 · 토론 · 사회자, 주요 내빈 |
| 발제 | 14:20~14:50 |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과 시사점 발제자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 토론 | 14:50~15:10 | 좌장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김택근 작가, <김대중 자서전> 대표집필자, <새벽: 김대중 평전> 저자 · 길윤형 한겨레 국제부장, <신냉전 한일전> 저자 |
| | 15:10~15:40 | 종합토론 |
| 질의응답 | 15:40~16:00 | 청중석 질의응답 |
| 폐회 | 16:00 | |

목차

03

환영사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04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05

격려사

문희상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06

발제문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64

토론문 1

‘김대중 납치사건’ 어디에 둘 것인가
김택근 작가
〈김대중 자서전〉 대표집필자,
〈새벽: 김대중 평전〉 저자

68

토론문 2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관계
길윤형
한겨레 국제부장

환영사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귀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대통령탄생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 50주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납치 50주기고, 내년은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년이 되었건만 2009년 1월 1일,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3대 위기가 다시금 떠오르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닐 듯 싶습니다.

1993년 납치사건이 발생한지 20년 만에 규명작업이 시작되었고,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지시에 의해 납치가 이뤄졌고, 단순 납치가 아니라 살해 목적을 가진 범행이었고,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가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납치사건은 정치적 반대자를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한 정치적 반대자를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집권층의 시도는 검찰권력을 매개로 합법을 가장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돌봐야하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도 와닿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 모두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을 맞아 박정희 유신시대 상황과 납치사건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주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님, 김택근 작가님, 길윤형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개최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김한정 위원장님과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김대중정치학교장이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대중탄생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앞으로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김대중의 업적과 성과를 재조명하고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위해 민주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8.11.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큰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자, 오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대중재단’ 문희상 상임부이사장님과 정태호 의원님,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 귀한 자리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신독재 정권이 자행한 정치테러인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한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군사정권은 민주화의 열기를 억누르기 위해

야당 지도자를 납치, 살해하려는 범죄를 기도했지만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이란 거인이 뿌린 민주화, 인권, 평화의 씨앗은

결국 대한민국의 기둥이자 민주당의 뿌리로 굳건하게 뻗어났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인동초’ 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거듭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문희상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김대중정치학교장 문희상입니다.

삼복더위와 휴가 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흔쾌히 발표를 맡아 주신 한홍구 교수님, 기꺼이 토론자로 나서 주신 김택근 작가님과 길윤형 한겨레 국제부장님, 그리고 사회를 봐주실 김한정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재단은 내년 1월 6일 큰 생일잔치를 엽니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큰 기념식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알리고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5번의 죽을 고비,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 망명 등 모진 탄압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야당 탄압이 국내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50년 전의 ‘김대중 납치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아직 제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다고 자서전에 증언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敬天愛人(경천애인), 事人如天(사인여천), 인내천(人乃天)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셨기에 8월 13일 생환하신 후에도 온갖 곤욕을 다 치르셨고, 사형선고까지 받으셨지만, 오직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안무치한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김대중이 되어 반민주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자료

한흥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다시 '김대중 납치사건'을 돌아본다

2023년 8월 11일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한흥구 (성공회대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

1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을 맞으며

2

▶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현수막 '당신의 목소리가 그립니다' (더불어민주당)

3

- 납치사건 50년 / 김대중 정권 종료 20년 /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년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황: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인 2009년 1월 1일 신년 하례회에서 우리나라의 3대 위기 지적: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 DJ의 경륜이 빛났던 상황: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주 쉬운 말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님
- 그 직후인 1월 20일 용산참사 발생
- 14년이 지난 지금, 이 3대 위기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 촛불과 탄핵으로 다시 민주정권을 세웠다가, 허망하게 정권을 내준 상황
- 군사독재와는 또 다른 검사독재에 민주주의는 질식
- 민주정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서민경제의 위기 더욱 심화
- 남북관계: 북미회담으로 잠깐의 장밋빛 기대의 순간을 지나 암담한 신냉전 상황: 윤석열 정권의 친미, 친일 일변도 정책
- 김대중 납치사건의 당사자 김대중이 열어간 새로운 한일관계의 의미

4

김대중 '납치'사건

5

- 1971년 4월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김대중이 일본으로 출국하는 1972년 10월까지 1년 반 동안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김대중 동향내사 보고가 무려 1100여건이니, 대략 하루 두번 꼴로 동향 보고를 할 만큼 김대중은 밀착감시를 받아왔다.



6



7



- 10월유신: 박정희의 친위쿠데타
- 헌법정지
- 야당의원 고문과 투옥
- 박정희의 유신 선포 당시, 신병치료 차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은 귀국을 보류하고, 일본에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시작

8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과 여전히 남는 문제들

9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의 역사

• 사건 직후~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전:

- 사건 직후
- 김형욱 증언
- 1987년 이후락 증언
- 1993년(납치사건 20주년) 7월 민주당 ‘김대중 납치사건 조사 특위’ 구성 / 용금호 선원, 그레그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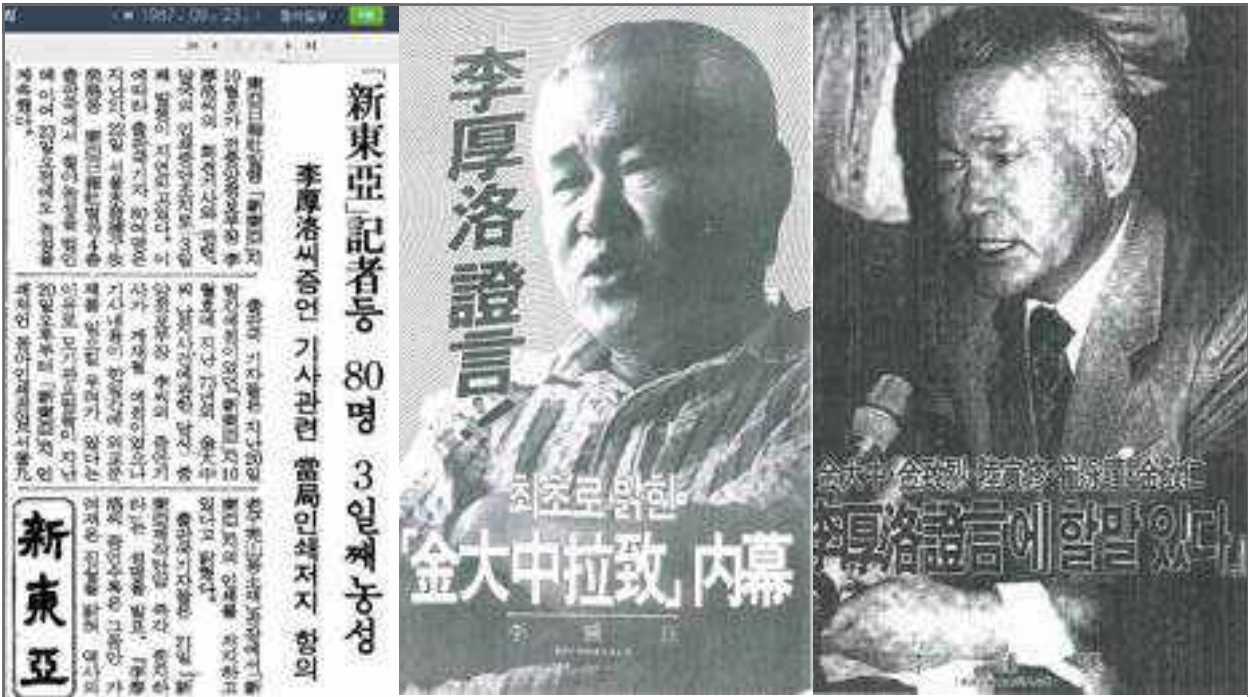
•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

- 취임 직전 98.2.19 동아일보 안기부 극비자료 KT 공작 문건 공개 /
- 정작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 국내적: 속된 말로 “종이 제 머리 못 깎는다”
- 일본과의 관계 문제:
-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납치사건 진실규명 대신 한일관계의 개선을 선택

• 김대중 대통령 퇴임 이후

-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10



- 6월항쟁 직후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동아 1987년 10월호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한 이후락의 최초 증언 게재
- 안기부의 인쇄 저지: 기자들 농성 등 우여곡절 끝에 발간
- 관련자들의 반박 증언 이어져: 김대중, 김치열, 육인수, 최영근, 김경인 등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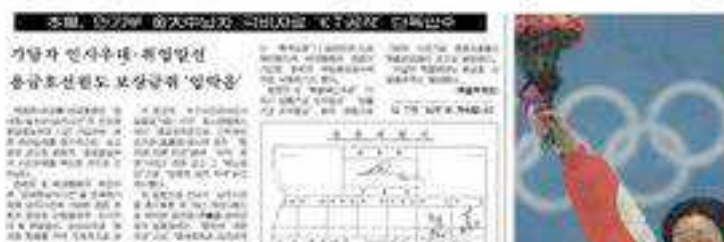
- 1992.12 대통령 선거 패배
- 1993년(납치사건 20주년) 7월 민주당 '김대중 납치사건 조사 특위' 구성 /
- 용금호 선원, 그레그 증언



12

김대중 대통령 당선 차대통령 납치사건 목인 은폐

반세기만의 '선거 정권교체' -李희창후보 승부



-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살짝 흘러나온 납치사건의 진상
-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납치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지 않았다 / 파헤칠 수 없었다



동아일보 1998.02.20 14면

돈·利權으로 46명 입 막았다

金大中 납치사건 25년만에 뱉힌다

중대 KT공사 기자사후관리

임용계정서

대통령

부통령

| 성명 | 직책 | 직급 | 연령 | 성별 | 학력 | 경력 |
|-----|---------|-----|---------|----|---------|---------|
| 신규철 | 신서면(이)계 | 사 | 신서면(이)계 | 남 | 신서면(이)계 | 신서면(이)계 |
| 윤진진 | 계리관 | 공정부 | 신규철 | 남 | 신서면(이)계 | 신서면(이)계 |
| 尹銀珍 | 계리관 | 공정부 | 신규철 | 남 | 신서면(이)계 | 신서면(이)계 |

중정의 납치사건 가담자 사후관리 방안

▼중점요원

| 이름 | 납치임무 | 납치당시 직책 | 76년 직책 | 현직 직권 | 해소방안 |
|-----|---------|---------|------------------|---------------------------|--------------------------|
| 김기완 | 현지도 | 주일공사 | 8국해외공작관 (LA혹색요원) | 국회 회당 | 상당한 보직 부여 |
| 윤진원 | 현장행동 | 8국공작단장 | | 명예회복희망 ·미결사행(금전관계)중산원함 | ·보직또는 취직업선 ·미결사행 조속중산 |
| 김병찬 | 주일1등서기관 | | | 보직변경희망 | 상당한 보직 부여 |
| 유영복 | 주일2등서기관 | | 8국 | 해외과견전문사로 사기저하 | 상당한 보직 보장 |
| 유종국 | 주일3등서기관 | | LA코트라요원 | 생계관련 | 특별예산지원 |
| 김봉실 | 인가지급 | 영사관 | 8국타자수 | | 이직시 생활기금 조치 필요 |
| 안응대 | 지상호송 | 운전사 | D그룹운전사 | 생계관련 | 생활기금조치 필요 |

차대통령 임용서명

- 납치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지속적인 관리
- 돈과 자리와 이권으로 입을 막았다 14



“73년 김대중 납치사건 朴대통령 묵시적 승인”

진실위 결론…‘KT공작서’ 못찾아 의혹 해소 한계

1973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김대중(당시남치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의 중심정보무슨 (국가정보원 전신) 자식으로 설명되고, 사건 이후 공명이 조작적으로 진해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진실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념백서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진실위 보고서는 73년 납치사건과 관련된 공안이 없었다고 공명이 작성된 계승여부인 ‘KT공작계서’와 발전위원회 합의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진실위는 24일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공작계서에 관해서는 이렇듯 필요정보에 게 “나는 참고 붙여서 하는 중 있어”라며 경계를 늦추고, 주일대사관 김 모 공사가 “박 대통령은 경제를 확언하기 전에는 공작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마다 큰 경우 암초였다는 등의 결론을 내놓았다.

진실위 보고서 결론을 내린 것은 당시의 박정희와 발전위원회 합의의 사실관계에 의한 의혹 해결이라는 주장과 유신체제에서 박 대통령이 모르게 승인한 공안이 진정일 수 없다는 공언이 있었을기 때문이다.

진실위는 어느 쪽 주장일 것인지를 구체화된 증거를 찾지 못한 탓에 “박 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관계는 별도로 대통령직속이공위원회에 넘겨질 상황이고 이후 관계까지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공작계서로서의 정치적·경제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납치사건이 외교가 1세대 단군님의 친서 ‘일본’ 없는사태 대해서는 ‘공작계서 단계에서 실재인이 노미했지만 당시 실정관계에서, 단군님의 항간에 확정한 것으로 보아 것이 어렵다.”고 공언이 공언을 다수 배합, 순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과거사위는 또 박정희 정부에 공작을 통해 제3대 대선(1987년 12월)

과 4대 대선(1988년 12월) 제7대 대선(1992년 12월) 등에 개입했다고 밝혔고 30일 유선으로 가는 마지막 대통령 직선제 선거결과 제7대 대선에서 승리는 “공산사건”이라는 공작계서에 김대중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7월 31일 특검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공작계서와 관련해 알려진 사실관계 확인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공작계서를 알지 못하고, 상황에서 묵시적으로 승인된 위법성이 있는 사실관계도, 공작계서와 관련해 공작계서 없이 사실을 필요정보에 주 사정관계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이후 조사 불충분한 의혹을 유발하는 공언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합천추진장국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납치사건은 공작계서, 당시 공작계서 주어진 한나라당이 군사적이라고 한 경우 자문의 사후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역사적으로 불합리한 일이지만, 공작계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www.thescoop.co.kr



진동 거듭한 ‘DJ 납치 보고서’… 늦게 나온 속사정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김대중 납치사건’ 조사결과가 최종 종합보고서에 포함돼 24일 공개되는 과정은 난산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의 비협조와 유무정 의 압박·방해 탓이다. 국정원 과거

사건 없이 문서로만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실제 국정원 과거사위는 이 사건 조사를 일찌감치 마치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쯤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발표는 계속 미뤄졌다.

국정원 과거사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에 발표하려고 했으나 당시 외교 당국이

과거사위 핵심 관계자는 “일본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대한민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외교부의 역사 의식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도 “진실규명에 필요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공개적 언명도 없다. 외교당국도

외교부, 일본 설득할 시간 달라며 발표 저지 일 정부도 막판까지 ‘보이지 않는 압력’ 행사

사위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 발표가 어떻게 늦어졌 것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표하지 못하도록 여러 경로로 막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이번 종합보고서 발간을 통한 발표도 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밀어붙여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유 등으로 이 사건은 국정원 과거사위의 ‘7대 의혹사건’ 가운데 가장 늦게, 그리고 유일하게 기자회견을 통한 상세

“일본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로도 같은 이유를 들며 대외 발표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발표가 늦어지는 사정에 대해 “일본과 외교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이 사건 관련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사전에 전해 달라는 국정원 과거사위의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본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끝까지 조사결과 발표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일본 정부의 외교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해훈 기자 nomad@hani.co.kr

光日春秋

한승헌



이 글을 써나가고 있는 중에 두 가지 번개가 쳤다. 한국 공보기관장에 의한 납치사건의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지난해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일본정부의 처사에도 강하게 항의를 표시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유경환 후임대사가 위 납치사건으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일본 외무장관에게 "유경"을 표명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를 "사실상 사과"라고 했다.

마침 일본 천리에서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된 나는 스한 글을 차용부터 다시 쓰려 쓸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의 진실규명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공표한 '김대중 납치사건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34년 동안이나 은폐되어 왔던 김대중의 행적에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그동안 이렇듯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할 일이었다.

그 조사보고는 의혹이 두 가지 핵심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놓았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같은

납치가 아닌 살해 복지를 가진 범행이었다는 점 등이다. 문장 상으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목시로 승인" 등 우회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식언 조사의 제약과 고문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DJ 납치사건과 일본의 책임

이러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 및 살해 목적의 유무가 국내외 관심사이며 반세기 앞의 발생지인 일본의 입장에서서는 영보주권의 침해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번 진실규명위의 발표가 나온 뒤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내지는가 하면, 해상스킵게 무슨 수사라도 할 만한 제스처까지 보였다.

지난 54년 동안, 전-일 두 나라의 시민 간에 맺은 언젠 등 각계에서 지인의 진상 및 책임 규명을 고쳐달 줄기까지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경우로 이를 못살해 온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진실조사 발표가 나오자 마치 브르그 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듯이 피해자 '사정평가' 유엔 국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연과 일본 당국은 1973년 6월 발표 예정 당시 피해자 신변의 안정을 사안에 간파하고도 공분의 안전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범죄 발생 후 목숨과 재산이 큰 데 침묵을 깨닫고 하지 않았으며, 법정의 도우 및 납치를 가능케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일본에 억압하게 인국하여 체류 중이었다. 더구나 그는 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박정희와 단합대상이 될 인물이었다. 이는 모로 보나 일본정부는 그의 신변의 안정을 의무한 기본인권을 지켜

도 권선의 '정치결핵'을 함으로써 두 정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가리지 않기로 합의 했다.(그랬을 경우하여 다가가 수상에 대한 공전 재공정까지 나왔었다.)

한국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할 일이다. 다만 그 엄격한, 범죄를 정당화거나 자기 면죄 내어서 감겨지지 못하고, 박정희 정권과 같은 유죄를 하여 상급한게 수사도 중단된 일본 당국이 그러한 자기 과오는 경어 하고 한국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되느니라였다.

일본 한국정부에 사과하루기 있다. 이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후 현재의 국무총리 강대통령의 친서를 읽다 하더라도 일본 수상에게 사과한 이상 일본정부가 또 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쳐서는 안된다. 그런데 아직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유경"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글 찾아내어지 지적인 비유 같은 일본정부의 여러 과오를 생각한다면 일본정부 또한 피해자를 한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지난날 두 번에 걸친 진실 규명 결과 소위 '정치결핵'은 어디까지나 정부끼리 단 서로 눈감아주기만 한 것이고,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책임을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여부는 엄연히 남아 있는 것이다. <변호사-법무법인 공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은 밝혀졌는가?

-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않았다?”
- “대략적으로는 밝혀졌다?": 이만큼 밝혀진 사건도 많지 않다!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 여전히 남는 쟁점들

- ‘김대중 납치사건’이냐 ‘김대중 살인미수사건’이냐?
- 박정희의 지시에 의한 사건인가, 아니면 이후락의 독자 범행인가?
- 비행기는 뺐는가?: 미국은 얼마나 개입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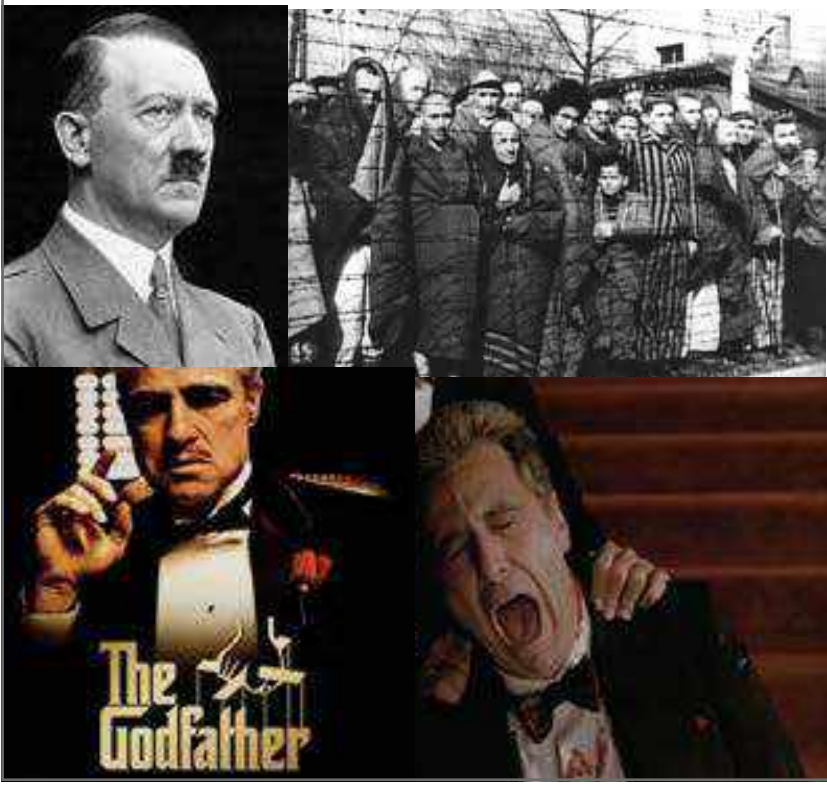
-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 박정희: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 이후락: “나는 뭐 하고 싶은 줄 아나?”



朴正熙 李厚洛 李哲熙 尹鎮遠 金基完

- 처음 김대중 납치에 선뜻 나서지 않았던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뒤에 모두 납치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계획이 박정희 선에서 나온 것을 어떠한 경로라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지시한 문서는 남아있는가?
- 마피아는 부하들에게 어떻게 지시하는가?

“박정희, 김대중 납치 직접지시 가능성 배제 못해”



한홍구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를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히틀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이 사건과 무관했다면 사건 발생 뒤 이후락 부장을 처벌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않았고,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점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의 공범 또는 주범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대중 납치 당시 김대중은 서울 용산구 여의도동 11-1번지 서울보통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사진은 김대중의 사위인 김기환이 김대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과거사조사위원회에 관한 법안
특별위원회에 제1차회의가 30일 오후 2시
국회를 남녁간 “안건”을 통과한 스
30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내
는 법안 자문회 및 기타 조사 위원회
연구위원의 보충을 수반해 30일 오후 2시

과거사위, 사건발생 24년만에 첫 정부차원 조사결과
관련자 (0여명 면담·1만2천쪽 국정원 문서 검토)
과거사 위조, 모함고 아첨의 역대 시책도 함께

● 추방·기타형 국외이탈자 등 국외
민간인도 입회 예정인, 국정원은 국
외 민간인 1천여명 면담, 추방 국외
민간인 1천여명 면담 예정이며 국외
민간인 납치과정도 2년 내 400여명
차별사유가 담긴 300여쪽의 국외

한홍구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를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히틀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이 사건과 무관했다면 사건 발생 뒤 이후락 부장을 처벌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않았고,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점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의 공범 또는 주범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김대중'납치'사건인가, 김대중'살해미수'사건인가 /
- 살해 지시는 있었나?



朴正熙 李厚洛 李哲熙 河泰俊 尹鎮遠 金基完 金東雲

- 박정희의 명시적 살해 지시가 있었다면 김대중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
- 윤진원은 김대중 납치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역설적으로 김대중의 목숨을 끊지 않은 장본인



株式会社
ミリオン資料サービス



- 야쿠자에게 의뢰하는 방안
- 자위대 출신 흥신소 이용 방안
- 외교 파우치로 들여오는 방안
- 일본 현지에서 살해하는 방안
- 2009.8.27 산케이 신문 보도 : 납치 사건과 자위대 관련설: 과장된 보도
- 실제로는 김동은이 평소 협력자였던 자위대 출신에게 1973.7.25~3일간 김대중 감시 의뢰한 것



23



前首都警備사령관

尹必鏞少將에 懲役15年 선고

- 7·4 남북 공동성명과 유신 쿠데타의 성공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락
- 박정희의 '퇴임 후'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박정희의 심복 윤필용 제거
- 윤필용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후락

24



- 1973년 일자미상 이후락은 중앙정보부 해외담당 차장보 이철희에게 김대중을 데려와야겠다고 제안
- 이철희가 동백림 사건 등 이유로 반대: 이후락은 “김대중을 데려와야겠다. 데려오기만 하면 그 후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말함



25



26

「HR몰락」 재촉 「가짜 要員 사건」

HR 10년 權座 물러나다

청와대-中情 가짜요원 고문 공방전
 잦은 權力남용 폭력수사 몰락 자초

육영수
 김두영



-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접적인 계기는 놀랍게도 김대중 납치사건이 아니라 가짜 부원 구타 사건
- 윤필용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벼랑 끝 몰린 상황
- 청와대 사정팀 검사 최대현, 문호철 등이 중앙정보부원 조사



이후락

최대현

문호철

- 이후락 싫어하던 육영수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 비서관 김두영 시켜 독자 조사

이후락:

- 이후락이 교체 원인은? 김대중 사건 때문이었나?
- 직접적인 원인은 1973년 9월의 가짜 중앙정보부원 사건: 육영수의 분노와 이후락 혐오
- 육영수가 이후락 싫어했던 이유
 - 1) 박정희의 바람기 조장
 - 2) 1971년 10.2 파동 당시 육영수 연행조사 (이휘운 증언 / 남산의 부장들 372(개))
 - 3) 부정부패
 - 4) 가짜 중앙정보부원 사건
- 일본정부 및 정계요인들의 이후락 비호: 한일결탁 과정에서 일본 요인들은 “한국 CIA가 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상부의 지시가 아니고 하층부의 과잉충성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대평(오히라)외상이나 외무성당국자들이 이후락 부장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백보를 양보하여 박정희가 김대중 납치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락의 지시 하에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납치사건의 벌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김대중 납치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박정희가 질 수 밖에 없게 됨



- 김대중은 눈은 테이프로 가리고 손발은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용금호의 화물창에 감금되었다.
- 김대중은 이때 중앙정보부원들이 자신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는데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 중정 요원들이 자신을 죽일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9




-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했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일본 경시청 등에서 김대중을 구하기 위해 비행기를 파견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30

김대중 납치사건의 범인들

31

| 身 上 記 録 書 | | | |
|---|-------------------|--------------------|-----------------|
|  | 職 級 | 1급 (간이관) | 姓 名 윤진원 (尹 鎮 遠) |
| | 本 籍 | 경남 함안군 용산리 97 | |
| | 住 所 | 서울 동산구 이재관음 243-12 | |
| | 職 業 | 〈국외〉공작원 | |
| | 生 年 月 日 | 1925. 1. 12 | (55 歳) |
| | 教 育 出 身 校 | 부산공영학교 졸업 | () |
| | 1970. 4. 25. 1971 | | |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현장에서 총지휘했던 윤진원공작단장을 재임용할 때 기안서에 첨부했던 윤씨의 신상기록서.



尹鎮遠(윤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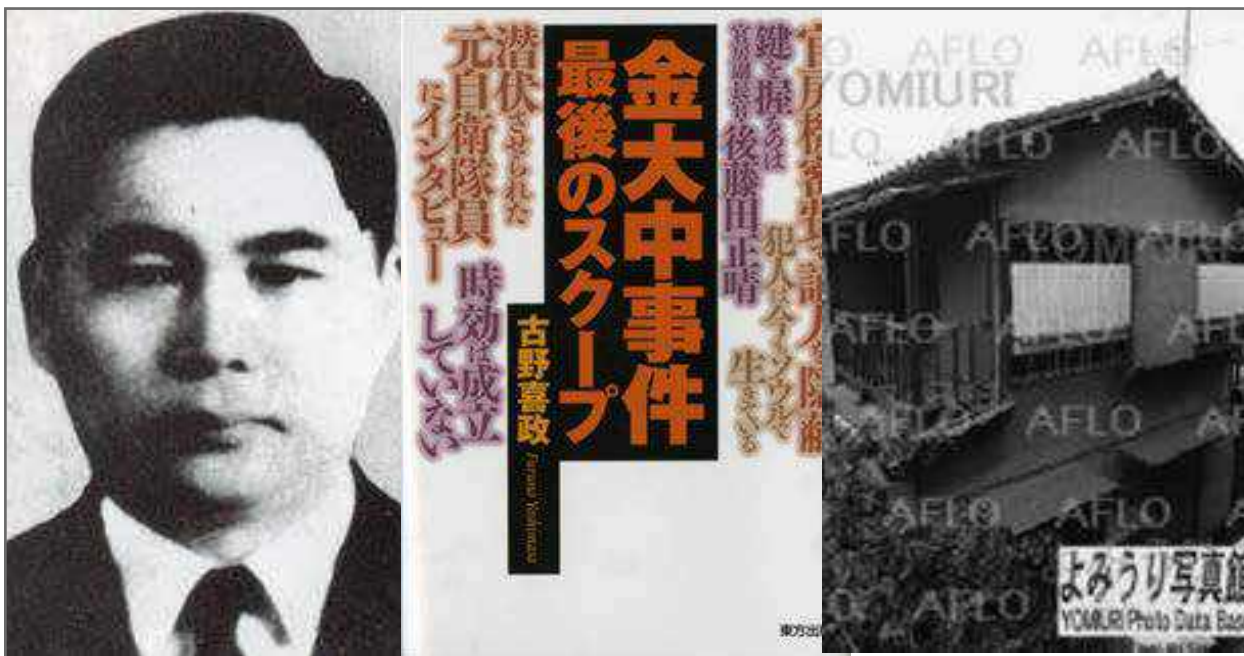
- 해외공작국 해외공작 1단장
- HID 출신 육군대령
- 실미도 책임자

32



- 金基完 = 金在權 駐日公使: KCIA 拠点長
- 15년 전 납치사건의 피해자였던 김기완이 15년 뒤 납치사건의 주범으로 등장
- 전 주한미대사 성 김의 아버지

33



- 김동운이 기자로 위장하여 일본 입국 시 등록한 지문이 발견됨
- 김동운 일등서기관이 살던 아파트
- 김동운은 8월 10일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

34

결국 해외공작단장의 윤진원을 일본에 파견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앙정보부원들이 납치를 실행한다고 결론

KT事件関與人士一覽表 (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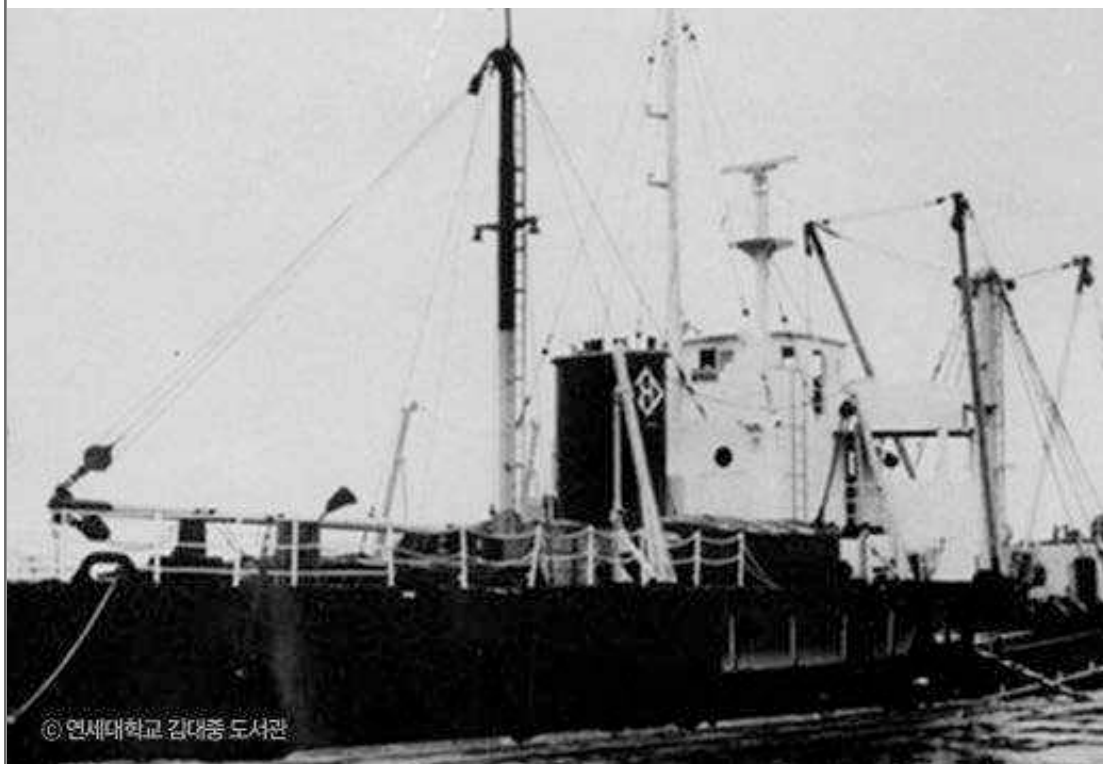
| 職級 | 姓名 | 任務分担 | 當時職務 | 現職務 | 現職에對한意見 | 現況 | 辦消方法 | 備考 |
|----------|-----------|---------|-----------|-------------------------|------------------------------|----|----------------------------|----|
| 1級 | 金基完 (金在權) | 現地指揮 | 駐日大使館 公使 | 8局 海外工作官 (4A 黑色要員) | 帰國希望 | | 相応に 補給 紙片 | |
| 首領 陸軍 大佐 | 尹鎮遠 | 現場行動 | 5局 工作團長 | | • 名譽國民希望 • 夫及中隊(金)의 同僚 金某 | | • 現況不明 • 夫及中隊(金)의 同僚 金某 | |
| 2甲 | 尹英老 | | 駐日大使館 參事官 | 7局 副團長 | | | | |
| 2乙 | 洪性赫 | | 一等書記官 | 2局 | | | | |
| 2甲 | 韓 椿 | 中前 現地指揮 | | 次長官 補佐官 | | | | |
| 2乙 | 金炳燮 (金東燮) | 現場行動 | | | • 補給及使希望 | | 相応に 補給 紙片 | |
| 2乙 | 劉永福 | | 二等書記官 | 8局 | • 海軍提議士 金某 以下 | | 相応に 補給 紙片 | |
| 3甲 | 柳忠園 | | | 8局 海外工作官 (4A KOTRA要員) | • 生計困難 | | 特別手紙 支援 | |
| 3甲 | 金命起 | 中前 現地指揮 | | 7局 海外工作官 (4A) (4B) (4C) | | | | |



- 이들 '행동대원'은 젊은 말단직원들이 아니었다. 당시 직급으로 상당한 고위직
-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정보원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프다.
- 납치 현장에 수많은 유류품과 육안으로 봐도 뚜렷이 보이는 지문을 남겨놓는 결정적인 실수: 장갑도 안 끼냐는 조롱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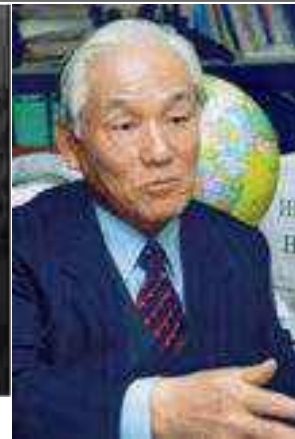
- 납치된 김대중을 한국에 싣고 온 중앙정보부 공작선 용금호
- 김대중 납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윤진원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일본을 빠져나가려 했던 것. 윤진원은 고민 끝에 김대중만을 용금호로 보냄



김대중의 조국을 배신하는
망국적인 해외행적을 그냥
두고 볼수없이 우리는 애국
총령에서 조국내로 끌어
들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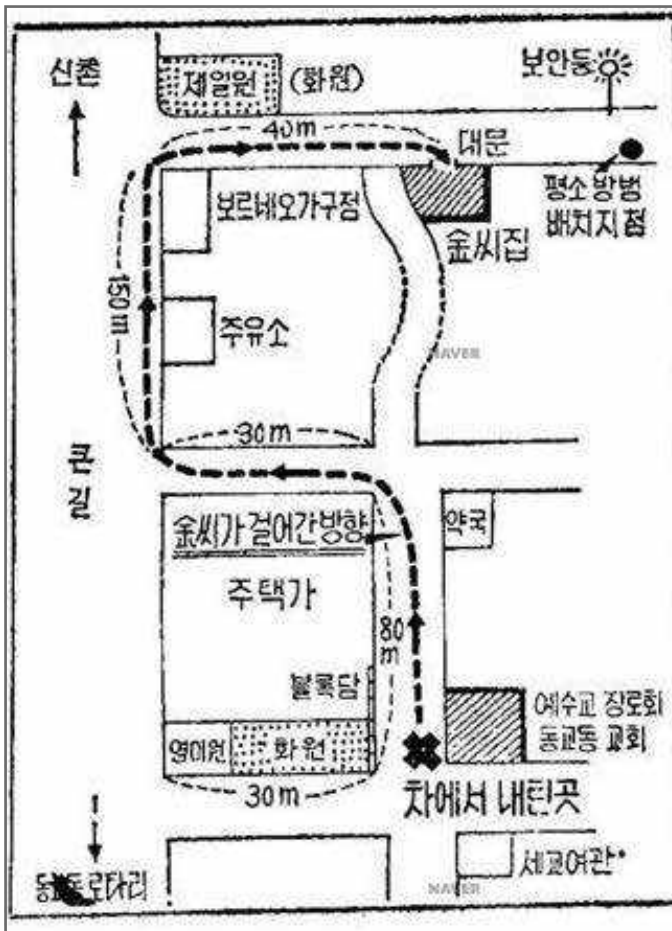
앞으로 어느 누구도 조국밖에서
조국을 배신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는 것이다

애국 청년 무국대



- 김대중은 8.11 밤 한국연안 도착
- 8.12 오전 부산 입항 / 오후 서울 도착
- 중앙정보부원들은 김대중을 8.13 22시 경 동교동 자택 부근에 풀어줘
- 김대중의 국내 이동과 석방을 담당한 해외공작단 대위 이휘윤(육사20기 / 실미도 관리 책임)
- 김대중 바지에 '애국청년구국대' 명의의 쪽지 넣어

39



1972년 10월11일 집을 떠난 지 10개월 만에, 납치된 지 엿새 만에 김대중은 자기 손으로 자택의 “초인종을 눌렀다. 막 퇴근한 가장처럼.”

40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결착'

- 한국 정부는 납치범 정체 꼭 밝히겠다며 김대중 귀환 다음날 특별수사본부 설치
- 연인원 8000명을 동원하여 요란한 수사
- 수사 방향: 김대중 자작극 또는 베트남공파 소행 / 납치사건보다 김대중의 일본에서의 활동만 열심히 조사
- 그러나 사건 개요조차 파악 못했다고 중간발표



- 수사본부장은 서울지검公安부장 정명래
- 정명래는 1차 인혁당 사건 기소 검사
- 국민의 정부 국무총리 지낸 이한동도 검사
- 모든 수사와 발표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정통제



43



수사본부 형사부장실에 설치된 제국 헌법 회의 사건 수사본부

- 한국측 수사본부장은 서울지검公安부장 정명래
- 일본측 특수본부장의 미츠이 오사무 (三井脩) 경시청公安부장
- 한국측 특별수사본부와 일본측 특별수사본부의 차이는?



44

- 국무총리 김종필은 국회에서 김동운 서기관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혐의가 없다. 그는 피해자임에 틀림없다고 주장(1973.9.24)



金씨는被害者... 自由생활



- 일본 정부와 자민당 보수정치인들은 김동운 정체 덮으려 /
- 중앙정보부의 조직적 범죄 아닌 김동운 개인의 일탈
- 증거 뚜렷한 김동운도 덮으려 한 일본정부나 정치인들은 주일대사를 역임한 박정희의 심복 이 후락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매우 우려하여 적극적 비호
- 오히려 외상: “어떤 경우에도 이 후락 부장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45



- 김종필: 진사사절
- 김대중 사건의 정치결착에 의한 한일유착 / 거액의 정치자금 제공
- 일본은 더 이상 한국 정부의 김대중 납치사건 개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 한국은 김대중의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46



49

김대중 납치사건과 8.15저격사건

50



51



문세광 역시 김대중의 연설 녹음을 10번 넘게 반복 청취할 정도로 김대중 구출 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그는 박정희 1인독재를 타도하는 것이 한국 혁명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자신은 “죽음이냐 승리냐의 혁명전쟁에 나선다”고 유서에 썼다.

52

東亞日報

저격범은 在日僑胞 文世光

陸英修女史 끝내 운명

19日 國民葬

요시이夫人拘

青瓦臺에 遺骸安置

김호봉 기자 회견
1974.8.18 일본 오사카

- 김대중-문세광-육영수 암살-베트콩-조총련-빨갱이

53

시이나 陳謝特使來韓
日章旗 찢고 自動車 불태워

“한국서 태어난 일본 청년이 한국경찰 총으로 일본 황후를 살해했다면 일본은 한국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냐”
박정희 대통령, 시이나 일본 특사에게

1974년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문서 공개

한국 “日과 단교불사” ... 美서 만류

- 한국은 제2의 을미사변(1895년 일본인들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보며 일본 책임 추궁 일본과의 단교 넘어 동경 폭격론까지 등장

54

김대중 죽이기와 한민통

55

형법

[시행 1975. 3. 25.] [법률 제2795호, 1975. 3. 25. 일부개정]

제1장 내란의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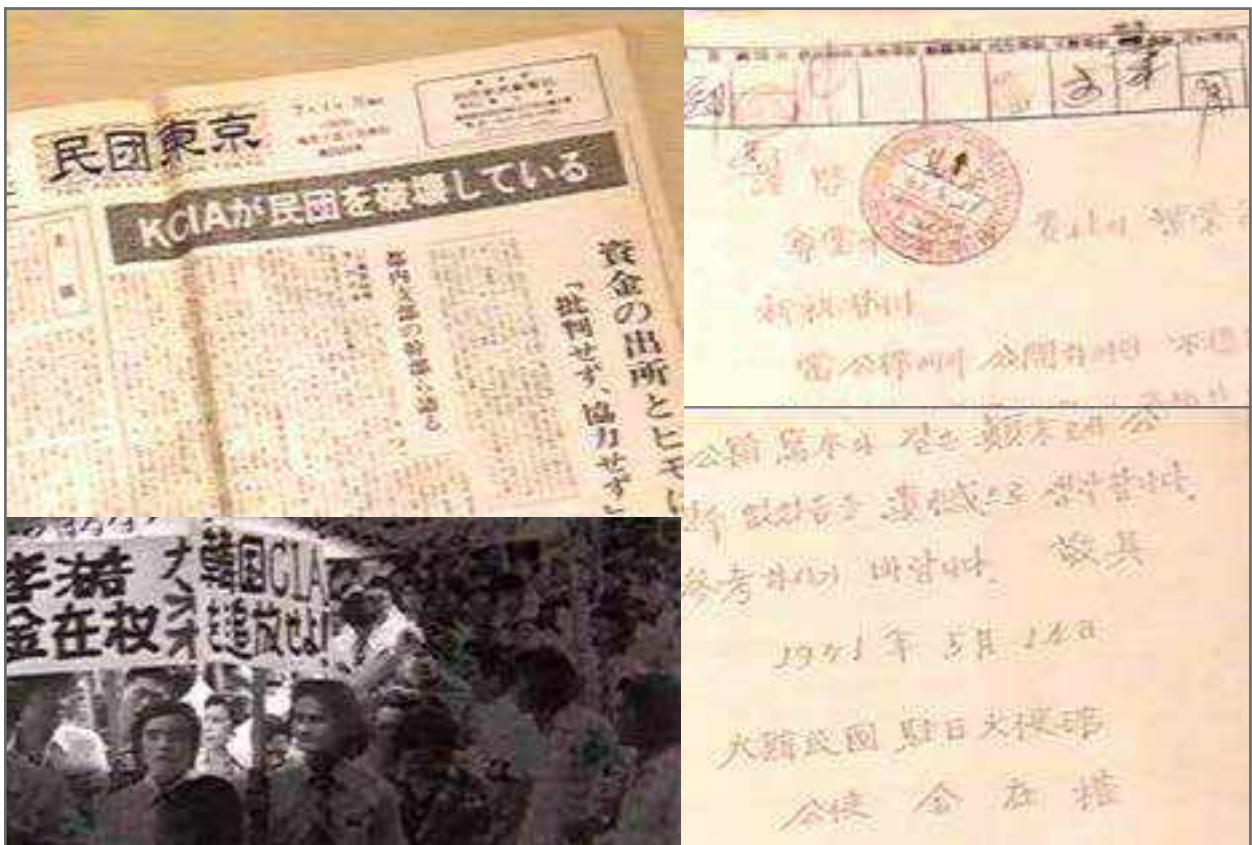
- 제87조 (내란) 국외를 침략하거나 국권을 손상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제1항에 처한다.
1. 수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직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심정한 자도 같다.
 3. 부활수령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외를 침략하거나 국권을 손상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제89조 (내수범) 제2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 제90조 (내란,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죄를 징역 또는 면제한다.
-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상 내란음모의 최고형은 사형은 물론이고 무기징역도 아닌 유기징역
- 즉, 내란음모 혐의로는 김대중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 김대중을 죽이려면 사형이 가능한 죄, 즉 국가보안법 적용해야

56

박정희 정권이 제일동포들을 이용해 야당과 민주인사 탄압한 역사는 매우 오래 됨

- 1967년 7대 국회의원선거(6·8부정선거) 당시 김재화 후보 구속과 신민당 예금동결
- 김재화 징역 1년 6월 (판사 이한동) / 김재화는 민단 단장 8회 역임한 반공민족지사
- 김재화는 신민당 전국구로 8대 국회의원 당선



- 일본 내의 중앙정보부 거점장 주일공사 김재권(김기완)의 민단파괴공작:
- 허위 녹음테이프사건



金載華
裴東湖
郭東儀
鄭在俊

김대중 구명을 위해 노력한 한민통
주요간부들



- 중앙정보부는 민단 자 주파(뒤의 한민통, 중앙 정보부는 베트남파라 지칭)와 김대중 사이에 통일문제 둘러싼 이견 알고 있었음
- 조총련과의 연대 문제 / 7.4남북공동성명 직후의 분위기
- '선통일후민주'냐, '선 민주후통일'이냐



임창영(林昌榮) 전 UN대사

- 1973년 7월6일 워싱턴에서 한민통 발기인대회
- 도쿄의 중앙정보부원들은 김대중이 일본에 온 임창영 전 유엔대사를 만나러 올 것으로 보고 그의 숙소 집중 감시
- 김대중은 한민통 미국본부 조직하고, 한민통 일본본부 조직한 뒤 전체 한민통의 의장 취임 계획: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에서 연수하며 민주화운동 할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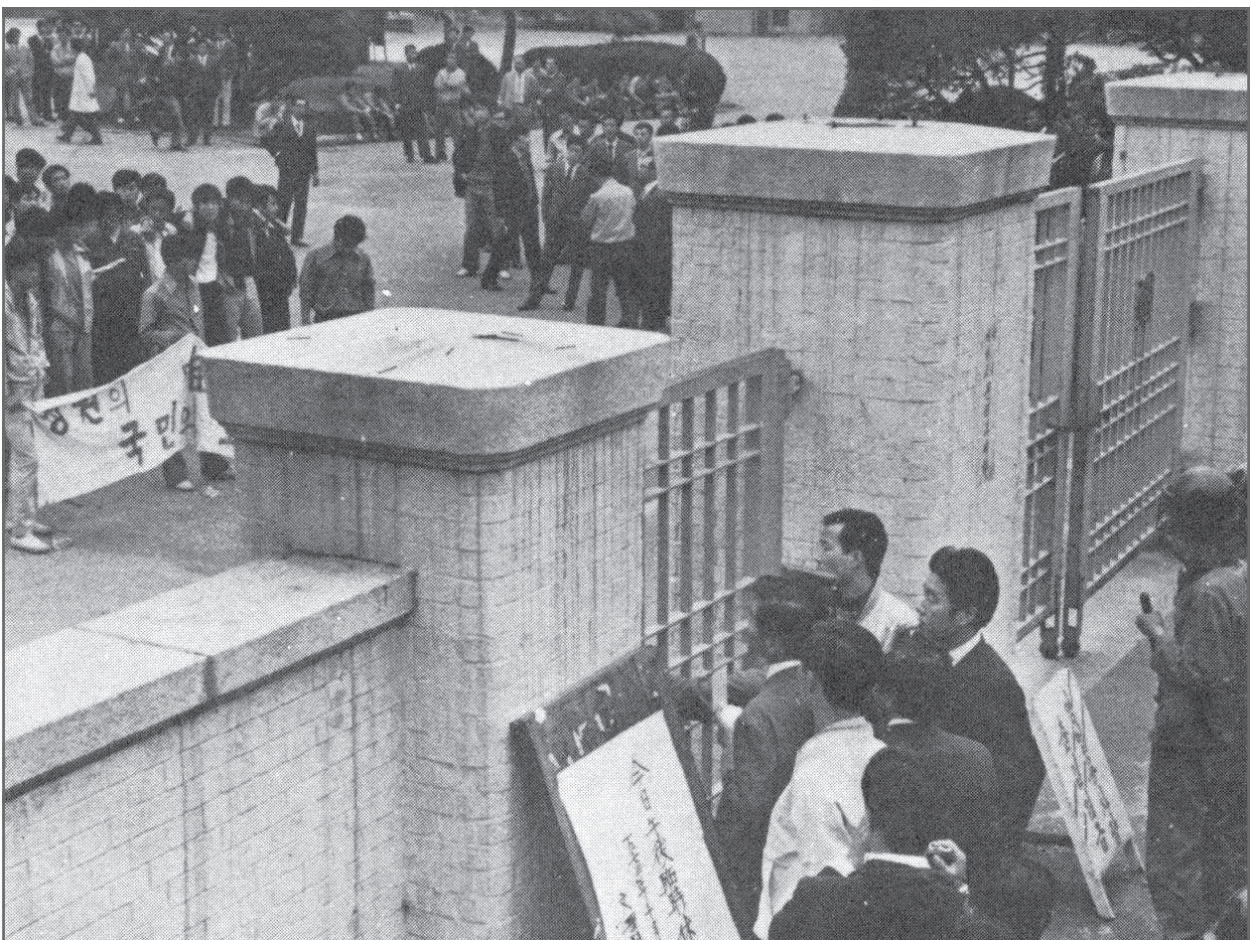
- 김대중은 그때만 해도 일본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님
- 세카이(世界) 8월호에는 김대중과 야스에 료스케(安江良介) 편집장과의 장문의 대담
- 김대중 납치: 한민통 광동익은 <세계>를 사다가 기자들에 배포
- 중앙정보부에 찍힌 광동익은 민청학련 사건에 등장!





-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대회는 일본본부 의장으로 김대중을 선출
- 원래 김대중은 한민통 미주본부,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 이후 전체 한민통 의장에 선출될 예정
- 김재화가 의장 대행
-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몰리는 계기

63





在野人士11名拘束

9名立件 政府전북선동





1977.6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김형욱이 김대중납치사건의 진상 폭로

67



- 1977년 일본에서는 3.1구국선언사건 1주년을 맞아 김대중 구출운동 본격화
- 미국에서는 김형욱이 프레이저 청문회 증언 예정 (77.06.22)
- 한민련 결성 움직임: 1977.8 예정
- 조선일보 특파원 **허문도**, 주일공보관장 **이원홍** 등이 적극적으로 한민통 음해: 반한단체 낙인
- 김대중-문세광-육영수 암살-베트콩-조총련-빨갱이
- 중앙정보부가 사주한 민단체 청년들의 한민련 결성대회장 습격 (1977년 8.1 3사건)



68



• 김대중-문세광-육영수 암살-베트콩-조총련-빨갱이

民主民族統一海外韓國人連合結成
民主民族統一運動に新次元
 海外韓國人民主運動代表者會議で

민주민족통일해위한국인연합 창립
 海外韓國人民主運動代表者會議 11개국에서 100여명참가

反韓집회 實力沮止


民團 청년들 東京서 韓民統 회의장 突入

日에 反韓 활동 강력 規制 요구


政府 「韓民統」은 北傀 조직 일환




(6) '자수' 간첩 윤효동 사건과 중앙정보부의 한민통 간부 전향 공작




중정국장 정흥진



在日北傀거물간첩尹孝同자수
민團과 과 활동 조종



在日反韓단체에 北傀서 工作金



윤효동 = 여흥진

郭東儀、北傀산임받는 間諜

-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사건과 한민통의 반국가단체 판결

韓民統은 反國家단체

大法院 在日동포 母國유학생에 檢査10년 확정



在日反韓앞잡이...베트콩派

在日韓民統派 團體 濫發活動 子圖



73

1978. 06. 19

韓民統은 反國家단체

大法、金整司被告 원심確定

김정사 (鄭京植) 母國유학생 檢査 10년 確定

- 김정사 사건 판결은 6.13, 기사는 6.20
-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기술은 1심 판결문에 만 있을 뿐,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한민통은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의 공안관계자 (아마도 정경식 또는 안경상)는 대법원이 판시한 바 없는 내용을 갖고 언론플레이 한 것





43

김대중 납치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75



76

(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한민통



이태영 변호사의 용감있는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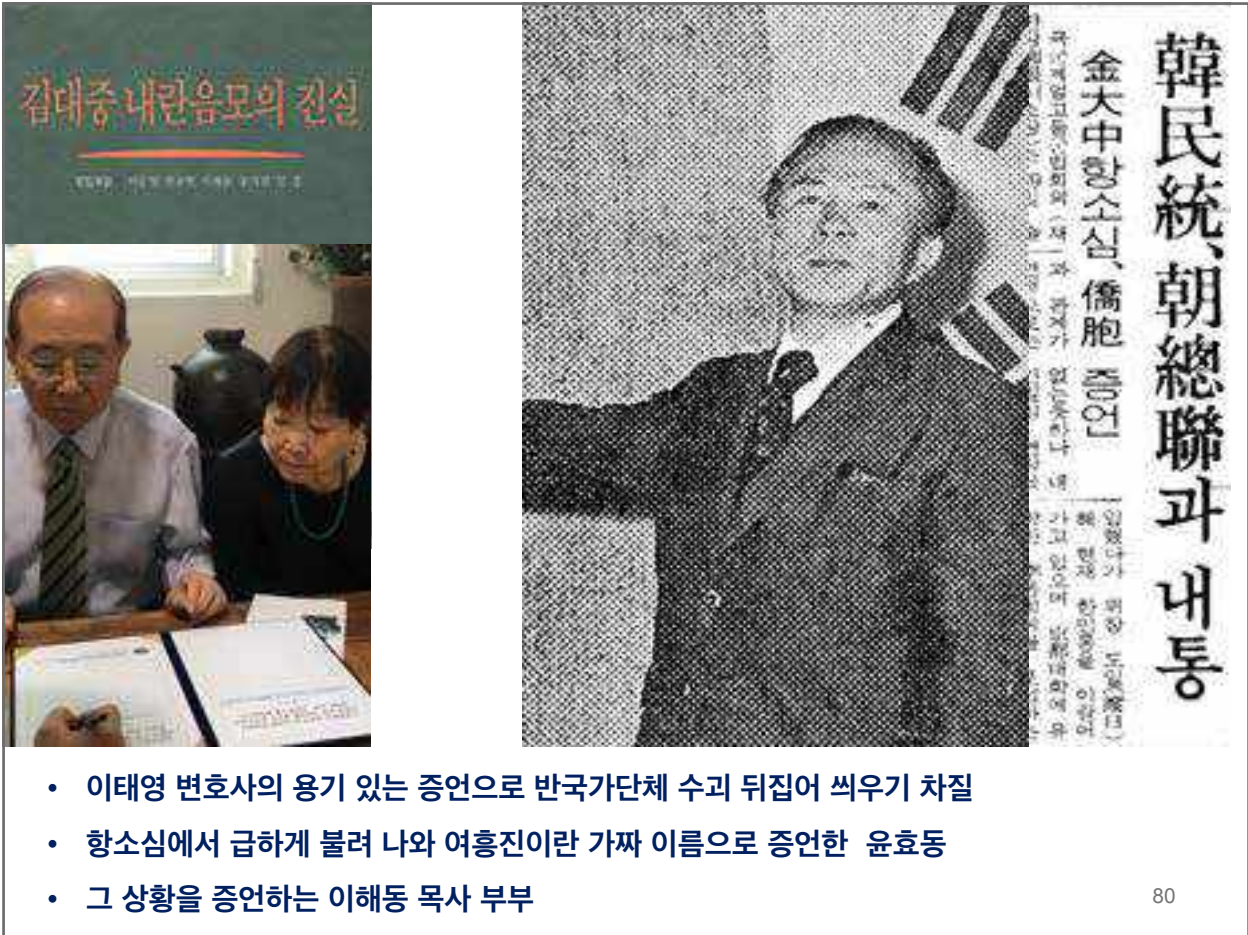
事實審理 모두 끝내

金大中등 15회公判 現場險證신청 기각

면서 사상적으로 조금도의 심치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관이 『金大中 피고인이 해방직후 좌익활동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李兌榮씨는 지난 4월초 미국에갈때 金피고인 집에들러 예비조로 5백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李씨는 또 『韓民統에 대해 잘알고 있느냐』는 75 검찰 질문에 대해 『지난 75년 9월 美日방문때 金大中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李씨는 75년 9월 방미인사차 金피고인 집에 들렀을때 金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金종철을 만나 한민통의장직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金季相씨는 73년 8월이전 金大中 피고인의 해외활동에 대한 수사를 한적이 있느냐



79



- 이태영 변호사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반국가단체 수괴 뒤집어 씌우기 차질
- 항소심에서 급하게 불러 나와 여흥진이란 가짜 이름으로 증언한 윤효동
- 그 상황을 증언하는 이해동 목사 부부

80

金大中공소장 日에 「가짜」전달

軍檢察 외교마찰 의식 내용 變造

金大中판결문 外交마찰우려 "極秘"로

軍裁, 辯護人-언론에 内容공개 일절안해



1심: 문응식: 육군중장 진급
군수사령관
서림학원(장안대학) 이사장



2심: 유근환: 육군소장 예편
보안사 참모장, 정보사령관
11, 12대 연속 전국구의원¹



金 濟 榭

김정사 간첩사건 판사김
황식(국무총리)



정흥진 중정 국장



영사증명 작성한 고문수사관 정낙중
동백림 사건,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등



鄭 京 植

윤효동과 김정사 연
결한 공안검사 정경
식
(대검 공안부장)
(헌법재판관)



한민통 반국가단체 판결
로 5.16민족상
수상한 공안검사
안경상
납치사건 당시중앙정보
부 대공수사국장
(감사원사무총장)



중앙정보부 대공수사
국장 김기춘



윤효동 = 여흥진⁸²



日本の錯覚 強者意識

政治要結内 용과 比較이 유로 全文요청
 僑善의人權내세위 세멋대 韓國批判

時代착오적對韓우월감버리라

日의 金大中 平平 李承晚 韓國의 主權 侵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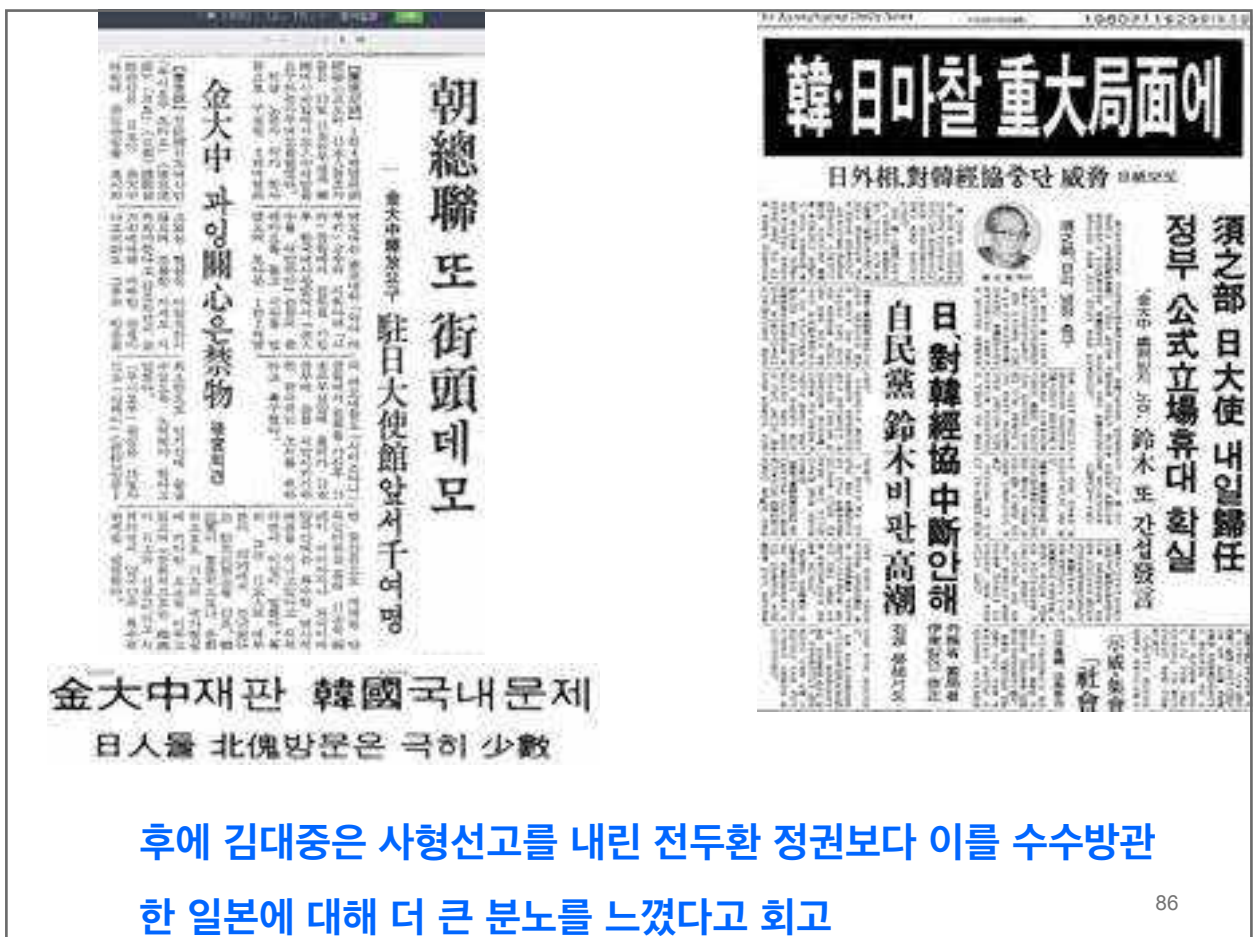
金大中 野慈의 韓日 關係 暗礁

日勢에 엄혀 對韓 壓力을 조장

www.yop.co.kr



85



후에 김대중은 사형선고를 내린 전두환 정권보다 이를 수수방관한 일본에 대해 더 큰 분노를 느꼈다고 회고

86

北傀지명반는 在日「偽裝배트콩」

「韓民統」와해상태

北傀지명반는 在日「偽裝배트콩」... (Main article text describing the situ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and the impact of North Korean propaganda.)

70년대부터 反共政府라도 革命을 선행
해서 反國家활동 더이상 할수 없어

北傀지명반는 在日「偽裝배트콩」... (Additional text and commentary.)

金大中 救出運動 小史
 ある「在日」の半生
 鄭在俊 著
 정재순



김대중 납치사건의 피해자

김대중 대통령이 열어간 새로운 한일관계

89



2002 FIFA World Cup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2002 FIFAワールドカップ 韓国日本



2002 FIFA World Cup official logo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한 분
노가 있었음에도

...



일 “한국에 고통준 과거 사죄”

90



일 영화·만화 즉시 개방

애니메이션·음반·게임등은 '한일 교류협'서 추후 논의

일본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교류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일본 문화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등 문화 분야에 대한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일본 문화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등 문화 분야에 대한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1



- 김대중이 과거 옛 일본인 스승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을 대며 일본어로 인사
- 일본사람들의 혐한감정과 불신 녹이는데 기여: 반대파들의 친일 공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 야당총재 시절 히로히토천황 조문



92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데...



93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 3대위가 양심은 지식인 아닌 깨어있는 시민의 것"



"민주주의 죽이고 경제살리기 성공못해 국민 눈감고 있으면 역사 계속 뒤로 가"

담벼락에라도 저항하라

이제는 시든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신랄한 웃음 쓰면서 비판해야 되겠다.
 신랄하게 웃는 사람은
 권력을 쥔 세 나라의 강대국에 투표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문들 보지 않고,
 또 정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최다호의
 담벼락을 쳐내고 울음 할 수도 있다.



94

발제보조자료

2012년 6월 2일과 6월 16일 한겨레에 연재했던 원고입니다.

제10화 김대중 ‘납치’사건(상) 김대중의 망명과 납치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이북이 일본인을 납치해간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일본에서는 이북이 납치국가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북이 일본인을 납치해 간 것은 백 번 잘못된 일이겠지만, 과거 일본이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징병으로, 징용으로, 군‘위안부’로 납치해 간 것을 생각한다면 이북만 일방적으로 납치국가로 몰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는 이북이 아니라 한국이 김대중 납치사건 때문에 일본에서 납치국가로 손가락질을 받았었다. 중앙정보부는 6년 전 독일과 프랑스에서 윤이상, 이응로, 정규명 등 해외동포 지식인과 유학생 수십 명을 납치해왔다가 국교단절 일보 직전까지 가는 곤욕을 치른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방국의 수도에서 대통령후보를 지낸 야당지도자를 납치하는 일을 저질렀다. 동백림사건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면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비상한 두뇌회전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천하의 피보 이후락이 이끄는 중앙정보부는 왜 김대중 납치사건과 같은 무리수를 두었던 것일까?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기 전부터 김대중을 몹시 싫어했다. 1967년 총선에서는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해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온갖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급기야는 자신이 군중집회의 연사로 나서기까지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예상 밖의 고전 끝에 김대중에게 간신히 승리하고는 다시는 이런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유신 친위 쿠데타를 단행한 것이다. 그때 김대중은 선거 기간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 와 있었다. 1971년 4월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김대중이 일본으로 출국하는 1972년 10월까지 1년 반 동안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김대중 동향내사 보고가 무려 1100여건이니, 대략 하루 두 번 꼴로 동향 보고를 할 만큼 김대중은 밀착감시를 받아 왔다.

김대중은 야당 의원들마저 잡혀가 고문을 당하는 현실에서 국내에서는 활동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외에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결성을 위해 노력했다. 배동호, 김재화, 정재준, 광동의 등 민단에서 이탈한 재일동포들과 함께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을 추진해온 김대중은 미국으로 건너가 1973년 7월 6일 워싱턴에서 한민통 발기인대회 마친 뒤 7월 10일 일본으로 돌아와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절대지지와 선민주 후통일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대중은 민단 이탈과 재일동포들에게 조총련과 선을 그어야 한다며 8월 15일로 예정된 조총련과의 경축행사도 중지토록 요구했다. 국내에 돌아가 활동해야 할 김대중은 혹시라도 흠탕물이 될까봐 이렇게 조심했지만, 민단 이탈파를 베트콩이라 부르던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다. 주일공사 김재권(본명 김기완)이 책임자로 있던 중정의 일본조직은 김대중이 주한미군철수와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중단을 호소했다거나 평양 방문을 추진한다는 등 잘못된 첩보를 본부로 계속 타전했다. 유신 이후 국내의 야당, 학생운동, 재야, 언론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해외에서 김대중만 홀로 반유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만 떠들지 못하게 만들면 반유신운동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누가 무엇을 지시했나?

김대중 납치사건에서 풀리지 않는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대중의 납치가 박정희의 지시를 이후락이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윤필용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후락이 박정희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인지 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의 원래 계획이 김대중 살해인지 단순 납치인지 여부이다. 필자가 말석을 차지했던 국정원과거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했지만 박정희가 김대중의 납치나 살해를 지시했다는 문건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아마도 그런 문건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히틀러의 서명이 담긴 지시문건이 없어도 우리는 유테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조폭의 세계에서도 살인의 교사는 목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치우고 싶은 미운 놈이 있을 때 형님이 아우들에게 저 놈 죽여라고 꼭 집어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저놈만 보면 소화가 안 돼” “나는 저놈만 보면 밥알이 곤두서” 등등 얘기하면 밑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이다. 싸인을 보내도 반응이 없으면 “귀신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하고 강도를 높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밑의 사람들을 “밥값도 못하는 놈들”이라고 구박한다. 아우들이 일을 저질러 경찰이나 검찰이 형님을 교사범으로 몰면 펄쩍 뛰며 “나는 그저 소화가 안 된다고 했을 뿐”이라며 소화가 안 된다면 소화제를 사다 줘야지 왜 애먼 사람을 칼로 담그냐고 짜증을 내면 된다. 박정희 주변 인사들이 입을 모아 김대중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에 박정희가 “이후락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짜증을 냈다며 “각하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박정희를 옹호하는 모습은 조폭업계의 형님동생 사이에서 흔히 보게 되는 광경과 매우 유사하다.

이후락이 중앙정보부 해외담당 차장보 이철희(이철희 ·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의 바로 그 이철희!)에

게 김대중에 대한 특단의 조치(최소 납치)를 지시했을 때 이철희는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해외공작이 어려워졌다며 펼쩍 뛰었다. 이후락은 열흘 뒤 이철희를 다시 불러 “김대중을 데려와야겠다. 데려오기만 하면 그 후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며 강력히 지시하여 이철희는 해외공작국장 하태준과 일본 현지의 중정 책임자인 주일공사 김재권 등을 불러 공작 계획을 수립했다. 이철희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권 역시 반발했으나 “내 선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니 반대의견을 부장께 직접 말하라”고 했고, 김대중을 직접 납치한 윤진원도 김재권이 “박대통령의 결재사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추진할 수 없다”며 버텼다고 증언했다. 처음에 극력 반대하던 이철희나 김재권이 결국 김대중 납치사건에서 계획수립과 현지공작에서 각각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이들도 결국 김대중 납치 계획이 이후락 선을 넘어 박정희 선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떤 경로로든지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작계획의 수립

김대중이 7월 10일 일본으로 돌아오자 해외공작국은 주일파견관에게 김대중의 동향을 집중 감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정이 김대중에 대한 공작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이 무렵의 일이다. 김대중에 대한 공작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작계획의 수립은 본부가 아닌 일본 파견관들이 담당했다. 주일공사 김재권은 주일대사관 일등서기관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던 김동운에게 공작계획의 수립을 지시했다. 김동운이 본부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그는 <KT공작계획안>(KT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김대중을 지칭하던 약어)을 7월 19일 특별파우치(재외공관 주재국 정부나 제3국이 열어볼 수 없도록 국제법으로 보장)편으로 서울로 보낸 뒤 21일 서울로 와 계획안의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 김동운의 계획안을 접수한 차장보 이철희와 해외공작국장 하태준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과 함께 계획을 검토했다. 윤진원은 당시 현역 육군대령으로 이철희의 HID 후배였다.

김대중 납치사건이 김동운이 작성한 <KT공작계획안>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 문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어떤 수준에서 김대중에 대한 공작을 준비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이지만, 불행히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이 문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철희, 김동운, 윤진원의 증언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윤진원에 따르면 이 계획의 제1안은 야쿠자를 이용하여 김대중을 납치한 후 파우치로 데려오는 것이고, 제2안은 야쿠자를 이용하여 김대중을 제거(암살)하는 것이었다. 김동운은 야쿠자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단순 납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살해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진원은 아무리 외교행낭이라도 사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야쿠자를 이용하

는 것은 살해든 납치든 정부가 두고두고 야쿠자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어 보안상 불가능하다며 김동운의 계획에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본부에서는 김동운이 제안한 야쿠자 이용방안 대신 주일파견관을 동원하여 공작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의 실행책임자로 윤진원을 추가 투입했다.

혼돈 속의 실행 준비

윤진원과 김동운이 일본에 온 7월 21일부터 중앙정보부는 일본파견관 전원을 동원해 주요 호텔에 잠복하여 김대중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했다. 그러나 김대중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은 김대중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고, 그의 동선은 극비에 부쳐져 있었다. 주일파견관들은 여러 정보원을 협조자로 활용하면서 김대중을 유인하여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7월 31일 밤에는 김대중이 한 식당에 출현했다는 제보에 윤진원과 주일파견관 6명이 긴급 출동했지만, 이미 김대중은 식당을 떠난 뒤였다. 본부에서는 차장보 이철희가 주일공사 김재권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그 물건(김대중) 빨리 해 보내라”고 계속 독촉했다. 중앙정보부는 점차 초조해졌다. 김대중은 8월 13일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식을 치르고 곧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할 예정이었다. 김대중이 미국으로 건너간다면 김대중을 처리할 기회는 물 건너가는 셈이 된다.

본부의 독촉에 처음에 소극적이었던 김재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재권은 주서울미국대사인 성 김의 아버지인데 성 김이 대사로 지명되었을 때 한국 언론은 김재권이 김대중납치사건에 반대했다거나 단순 연루된 것 정도라고 서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가 처음에 반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곧 입장을 바꿔 현지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재권은 8월 8일 김대중이 일본을 방문 중인 통일당 당수 양일동을 만나러 양일동의 숙소 그랜드 팔레스 호텔 2211호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이틀 전인 8월 6일 입수하여 윤진원 등 행동대가 김대중을 납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김재권은 1958년 공군 정훈감 시절 민항기인 KNA기에 탑승했다가 비행기가 간첩에게 납북되는 바람에 평양으로 끌려갔다가 2주일 만에 풀려난 일이 있다. 납치되었던 자가 15년 후에 납치범이 된 것이다.

목장갑만 끼어도

김대중을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직접 납치한 사람들은 이미 여러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공작 단장 윤진원, 주일대사관 참사관 윤영로, 일등서기관 홍성채, 김동운, 이등서기관 유영복, 유충국 등이 고 일등서기관 한춘은 현지정찰임무를 수행했다. 이들 ‘행동대원’들은 젊은 말단직원들이 아니었다. 당시 직급으로 윤영로와 한춘은 이사관인 2급 갑, 홍성채, 김동운, 유영복은 부이사관인 2급 을, 유충국만 서기관인 3급 갑으로 모두 상당히 고위직에 이른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정보요원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피 납치현장에 수많은 유류품과 육안으로 봐도 뚜렷이 보이는 지문을 남겨놓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영화 <화차>에서 신분이 탄로 날 위기에 놓인 강선영이 집으로 달려가 지문과 모든 흔적을 없애는 처절한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KT공작계획>의 작성자 김동운이 남긴 이 어처구니없는 지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대중 납치에 반대하는 정보부원이 일부러 지문을 남긴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고, 일본기자들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삼백 엔짜리 사건이라고 비아냥거

렸다. 삼백 엔짜리 목장갑만 끼었어도 한국정부가 그렇게 곤욕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또 현장에 권총 탄창, 대형 룡색, 마취제가 든 영양제 병 등 여러 점의 유류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는 이북담배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부가 김대중 납치를 이북의 소행으로 덮어씌우려 했다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정보부원들은 원래 양일동이 묵는 2211호의 옆방인 2210호실을 예약했는데 마침 앞방인 2215호실의 문이 열려 있어 두 방에 나뉘서 요원들이 대기했다. 그 중 2215호에 우연히 이북담배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량의 유류품을 남기게 된 것은 복도에서 김대중을 배웅 나온 통일당 김경인 의원과 마주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2210호실에 있던 납치대원들이 급하게 김대중을 끌고 내려가면서 2215호실에 있던 감시조가 뒤처리를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감시조는 2210호실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빠져나와 버렸다. 너무나 어설프지만 어쨌든 납치는 성공했고, 중앙정보부원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도쿄를 빠져나와 무사히 공작선 용금호가 대기 중인 오사카에 도착하여 김대중을 국내로 실어 보냈다. 그러면 김대중 ‘납치’사건은 성공한 공작일까?

제11화 김대중 ‘납치’사건(하)

윤진원이 이끄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도쿄 시내에서 김대중을 납치하여 오사카에서 중정 공작선 용금호에 실어 서울로 보내버렸다. 그렇다면 김대중 ‘납치’사건은 성공한 공작일까? 사건의 피해자인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1998년 2월 19일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한 <KT공작요원 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에 깊게 관련된 인물이 모두 다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현직에 있었지만, 유독 윤진원만은 옷을 벗었고 명예회복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역 육군대령의 신분으로 김대중 납치에 성공한 윤진원은 장군진급에 탈락해 옷을 벗고 중정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일본 경찰의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김대중을 서울로 실어 보낸 윤진원은 왜 물을 먹어야 했던 것일까?

성공한 납치, 실패한 살해

원래 윤진원은 도쿄에서 김대중을 납치하여 오사카로 이동하면서 시가현 오오츠(滋賀県 大津)에서 오사카 총영사관에 나와 있는 중정요원들에게 김대중을 인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들과 같이 엇갈려 버렸다. 오사카 요원들에게 김대중을 넘기는데 실패한 윤진원은 할 수 없이 오사카의 중정요원들이 운영하는 안가로 김대중을 데려갔다. 윤진원은 이 무렵 마음속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처음 그는 김대중을 오사카 요원들에게 넘기고 오사카 항에 대기 중인 중정 공작선 용금호를 타고 일본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오사카 요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김대중을 데리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점점 불안해진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토막 살인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오사카 요원들에게 넘겨 그들이 김대중을 처리한다면 자신은 ‘납치’만 한 것으로 먼 훗날에라도 제한적인 책임만 져도 되지만, 자기 손으로 김대중을 살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윤진원은 김대중을 자신이 일본을 빠져나올 때 쓰려고 대기시켜 놓았던 용금호에 실어 보내고 자신은 일본에서 잠적해버렸다. 용금호에 실린 김대중이 한국 영해로 들어가는 순간 김대중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외 공작단장’인 자신의 관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윤진원은 김대중을 죽이든 살리든 그 책임을 이후락이나 박정희에게 떠넘긴 것이다. 김대중 납치가 공작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윤진원은 의기양양하게 김대중을 잡아다 자신이 직접 이후락이나 박정희에게 바쳤을 것이다.

박정희도 이후락도 명시적으로 윤진원에게 김대중을 죽여버리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그저 중앙정보부는 뭐하고 있냐고, 김대중 하나 떠들지 못하게 하냐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공작단장인 윤진원 차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줘야 하는데 윤진원은 김대중이 도쿄에서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하는, 딱 거기까지만 하고 골칫덩어리를 산 채로 ‘진상’하는, 박정희나 이후락이 보기에 정말 ‘진상’을 떨어버렸다. 윤진원은 김대중을 납치한 흉악범이지만, 동시에 김대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묘책을 만 들어낸 것이다. 김대중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윤진원도 이후락도 박정희도 모두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이 ‘숨 쉴 채’ 부산 앞바다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박정희나 이후락이 지었을 표정은 가히 예술작품이었을 것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다 주인에게 나 잘했지 하고 갖다 주어 기겁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한다. 윤진원은 이런 멍청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는 용금호에 김대중과 같이 타지 않고 일본에서 잠적해버렸다가 김대중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야 중앙정보부에 연락을 취했다. 윤진원이 취한 행동은 사실상 자신을 처벌한다면 그냥 일본에 망명해버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본부에서는 하태준 국장을 일본에 보내 윤진원에게 직접 신변 안전을 보장하여 귀국시켰다.

꼬여가는 한일관계

김대중 납치로 한일관계가 꼬여가자 박정희는 연일 짜증을 냈다. 중앙정보부 일각에서는 “납치 때와 마찬가지로 김대중을 도쿄로 갖다놓으면 될 게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한다. 이철희 등 납치사건 책임자가 윤진원에게 “도로 갖다놓을 수 없느냐”고 말을 꺼냈다가 윤진원이 “권총을 빼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대들기도 했다”고 한다. HID 출신의 현역 육군대령으로 당시 대북공작에서 맹활약했던 윤진원은 결국 장성 진급에 실패했고, 그가 이끌던 해외공작단도 해체되었으며 그 역시 중앙정보부에서 물러나야 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의 목표가 ‘납치’가 아니었으며, 김대중을 납치해 서울로 데려온 것이 ‘성공’한 공작이 아니었음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다.

김대중은 눈을 테이프로 가리고 손발은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용금호의 화물창에 감금되었다. 김대중은 이때 중앙정보부원들이 자신을 바다에 빠트려 죽이려 했는데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 중정요원들이 자신을 죽일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했지만, 미국 CIA나 일본 경시청 등에서 김대중을 구하기 위해 비행기를 파견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CIA 한국책임자로 김대중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역시 미국은 어떤 비행기도 띄운 바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짧은 시절 해운업을 했던 김대중은 배의 움직임만으로도 크기와 성능을 알 수 있었다면서 확실히 비행기 소리를 들었다 주장했다.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님까지 만날 수 있었던 김대중의 체험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용금호에 실려 납치 다음 날인 8월 9일 오사카를 떠난 김대중은 8월 10일 밤 부산항 외각에 도착하여 하루를 보내고 11일 밤 하산하여 의사의 간단한 진찰을 받은 뒤 엠블란스를 타고 서울 모처의 중앙정보부 안가로 옮겨졌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8월 13일 밤 저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자택 앞에 풀어주었다. 1972년 10월 11일 집을 떠난 지 10개월 만에, 납치된 지 엿새 만에 김대중은 자기 손으로 자택의 “초인종을 눌렀다. 막 퇴근한 가장처럼.”(자서전)

김대중은 돌아왔지만,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한국은 1967년 동백림 사건 당시 독일과 프랑스에서 한국 지식인과 유학생들을 납치하여 국내로 이송했다가 국교단절 일보직전까지 가는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도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또 다시 납치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박정희가 얼마나 심하게 김대중 문제로 중앙정보부를 압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김대중 납치사건의 총책임자인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이 되기 전 1년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주일대사를 지낸 일본통이었다. 만약 주일한국대사관 일등서기관 김동운이 김대중 납치 현장에 지문을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수도 도쿄에서 일어난 납치사건이라는 엄청난 주권 침해에 대해 모르는 척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김동운의 지문을 확인하고도 이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우시로쿠 주한대사에게 일본 경찰이 한국정부가 관련됐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일본정부로서는 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전에 한국 측이 자발적으로 선처하도록 조치하라는 훈령을 내려 보냈다. 김동운은 사건 직후인 8월 10일 홍콩을 거쳐 귀국했다가 8월 17일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일본 경찰이 공항에서부터 미행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틀 후 다시 귀국했다.” 일

본 요미우리 신문은 8월 23일 김동운이 납치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 소식통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가 서울 지국이 폐쇄되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동운의 출두를 요청한 것은 그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고도 보름 가까이 지난 9월 5일에 가서였다.

박정희 친일 정권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저지른 전대미문의 주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일본의 ‘친한파’ 보수정치인들은 사건의 무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양국 정부는 김대중 납치사건을 김동운 서기관 개인의 범행으로 매듭지었다. 현장에 김동운 1인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기관원들이 있었고, 그랜드펠리스 호텔에서 김대중을 태우고 황급히 빠져나간 차량(品川 55ㄱ 2077)의 소유자가 요코하마 총영사관 부영사 유영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김대중이 일본에서 끌려간 안가가 고베시에 있는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 박종화 명의로 된 집으로 지목되었는데도 일본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김동운이 “일본경찰 당국의 혐의를 받는 등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상실하고 품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공무원에서 해임시켰다”, “해임 후 계속 수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확증을 얻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11월 2일 국무총리 김종필은 박정희의 친서를 휴대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수상 다나카에게 사죄했다. 김종필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영접 나온 외상 오히라는 뻗뻗하게 악수하고 총리 김종필은 머리 숙여 인사해야 할 만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선치를 바라야 할 형편이었다. 한진 그룹의 조중훈은 따로 다나카를 방문해 박정희가 보내는 4억 엔이라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일본에서는 김대중의 원상복원, 즉 김대중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다나카는 “김대중이가 들어오면 시끄러우니 보내지 말라”고 한국 측에 얘기했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돌았다. 식민지 시대부터 맺어진 한국과 일본 보수정치인들 간의 끈끈한 유착에 기대어 그들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한일 간의 모든 문제가 ‘결착’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와 함께 사건을 은폐한 일본의 태도는 2007년 10월 국정원과거사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김대중 납치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려 했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일본 측은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납치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수사를 재개하여 김동운의 송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말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구해왔다. 민주적 정권 교체에 의해 한국 정부는 1973년의 냄새나는 ‘한일결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반면,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부끄러운 거래가 드러나는 것을 여전히 원치 않고 있었다.

은폐의 주역 박정희

사건의 시작과 끝은 역시 박정희였다. 박정희가 진실로 김대중 납치사건과 무관하다면 그는 납치범들을 처벌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을 납치한 흉악범들은 어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한일 결착’이 이뤄진 후인 1973년 연말 개각에서 이후락이 3년 만에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물러났을 뿐이다. 1976년 말이나 1977년 초에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KT사건 관여인사 일람표>를 보면 윤진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방안으로 ‘복직 또는 취직 알선’이라고 한 반면,

김동운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직변경을 희망함으로 상응한 보직을 부여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동운은 형식적인 해임 후 바로 복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동운은 해직 1년 후에 복직되어 8국 부단장에 임명되었으나 두 달 후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해 와 원남동에 사무실을 얻어 직책도 없이 부이사관급 대우를 받으며 8년 간 근무하다가 1982년 말 퇴직했다. 위의 일람표가 작성될 당시 김기완은 8국을 해외공작관으로 LA의 주재 흑색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윤형로와 홍성채는 각각 7국과 2국의 부국장, 한춘은 차장 보좌관으로 있는 등 전원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납치범들을 철저히 비호했던 것이다. 김대중을 살려 보내 장성 진급에 실패한 윤진원은 1975년 말 용금호 선원들의 밀수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퇴직되었다가 1977년 8월 박정희의 지시로 관리관에 재임용되었다. 박정희는 일본의 보수정객들과 손잡고 사건을 은폐하였을 뿐 아니라 납치범들의 뒤를 철저히 봐준 것이다.

사건의 여파

김대중 납치사건의 여파는 심각했다. 8월 28일 이복은 김일성의 동생인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명의로 김대중 납치사건의 주범인 서울측 공동위원장 이후락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10월 2일에는 유신선포 1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유신반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시위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학생들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간첩사건을 만들어내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일본에서 한국은 납치국가, 깡패국가가 되어버렸고, 재일동포 젊은이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문세광이라는 과격한 재일동포 청년이 박정희를 저격하려다가 육영수 여사가 피격당한 비극적인 사건 역시 김대중 납치사건의 결과였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인과관계를 지적한 것은 박정희 자신이었다.

토론문1 '김대중 납치사건' 어디에 틀 것인가

김택근 작가
〈김대중 자서전〉
집필자

한홍구 교수의 발제자료(사건요약 파일 및 원고)를 잘 읽었다. '김대중납치사건'의 전모와 소위 정보부 공작의 실체를 세밀하게 규명해주셨다. 또한 한·일정부의 결착과 사건 이후 김대중의 행보도 면밀히 추적해주셨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필자 또한 〈김대중 자서전〉을 집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듣고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보며 사건의 시작과 끝을 살펴본 바 있다. 새삼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을 맞아 생전의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려보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김대중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2007년 1월 23일 구술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34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기적 같은 생환의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 숨을 죽였고, 김대중의 목소리에는 공포도 묻어있었다. 김대중은 생전에 살아서 돌아온 8월 13일을 각별하게 챙겼다. 해마다 모임을 갖고 미사를 드렸다. 납치사건을 어떤 느낌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납치사건을 김대중에 국한하여 진상을 파헤치고 진실을 규명해왔다. 하지만 김대중 납치사건은 우리 민주화 여정에 깊이 새겨져 있다. 김대중이 곧 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대중이 극적으로 생환하여 자택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눈물을 흘리던 광경을 기억한다.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재일교포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듯 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선생은 내 청춘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낭만적 감상만 과도하게 부풀어 현실 도피를 되풀이하고 있던 내가 부모님의 나라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재생’을 맹세한 학생시절, 선생은 이미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 존재였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도 찾지 못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내게 ‘김대중 납치사건’은 김대중이라는 존재를 결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 (...) 당시 서울의 자택에서 기자회견에 응한 선생은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테러의 공포도 있었을지 모른다. 또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데 대한 분노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생의 그 눈물은 이렇게 생환하여 다시 정치가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기회를 부여해 준 하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 강상중, 〈반걸음만 앞서가라〉

맞다. 김대중의 생환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다. ‘눈물 나게’ 고마운 일이었다. 김대중은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간절하게 기도했다.

“살려주십시오, 아직 세계는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가 나타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했다. 테이프가 감겨서 눈을 뜰 수 없음에도 눈앞에 붉은 섬광이 일었다. 그리고 폭음이 들리며 비행기가 나타났다. 김대중은 그때 절명의 위기에서 했던 약속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을 잊지 않고 살았다.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끝까지 국민을 믿고 민심을 따랐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서울대 문리대생 300여 명이 김대중 생환 한 달 남짓 후(10월 2일)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유신정권 출범 후 첫 학생시위였다. 이후 병영국가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불길이 솟아올랐고,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발동시켜 이를 억눌렀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분명 민주화 투쟁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김대중에 관한 논의는 다분히 방어적이었다. 그는 항상 음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처지였기에 누구도 공격적으로 무대에 올리지 않았다. 물론 납치사건으로 김대중 개인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어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공격적인 논의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김대중은 역사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납치사건의 전체를 조명하다 보니 박정희가 왜 김대중을 제거하려 했을까 하는 점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느낌이 든다. 정치인 김대중이 박정희의 정적으로 떠오른 것은 1971년 대통령선거였다. 그때 김대중은 94만 표 차이로 패배했지만 나름 엄청난 선풍을 일으키며 정계의 거물이 되었다. 그 선거를 치르며 박정희는 김대중을 ‘최대의 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박정희는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겨우 김대중을 이겼다. 그때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겼다면 어찌되었을까. 박정희가 패배를 인정하고 순순히 정권을 내놓았을지, 또 병영국가를 구축하고 영구집권의 수순에 돌입했던 박정희가 민심에 순순히 투항했을지는 불투명했다. 이는 망명 중인 김대중에게 보낸 이희호 여사의 편지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요즘 생각해보면 1971년 당신이 당선되지 못한 것도 하느님의 뜻이 있었나 봐요. 만일에 당선되었다면 당신 생명도 주위의 몹쓸 사람들 때문에 위협이 따랐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김대중을 세 번이나 죽이려 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 후에 김대중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1971년 5월, 지방유세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김대중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대형트럭에 치여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동맥이 잘리고 오른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김대중은 이때 ‘건강한 다리’를 잃었다. 사고를 낸 트럭의 주인은 공화당 비례대표 후보

였다. 김대중은 이때부터 온갖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독재자 박정희에게 유일한 정적은 김대중이었다.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을 세상 끝까지 따라다녔다. 정보부의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공포정치의 진원지였다. 박정희는 김대중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위협했지만 또 그만큼 김대중을 두려워했다. 미국에 망명했던 전 정보부장 김형욱은 이렇게 증언했다.

“박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1971년 그와 대결한 야당 후보 김대중 씨와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는 미국 국회였다.”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때 김대중은 일본에서 귀국하지 않고 망명을 결행했다. 혹시 그가 국내에 있었다면 납치사건 같은 살해 위험은 없었을까. 아니다. 국내에 있었어도 살해 위험은 상존했을 것이다. 이희호 여사가 망명 중인 김대중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중앙정보부에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떻게든지 귀국시켜 구속한다는 말이 들려요. 그리고 일본서도 당신 꼭 미행하는 줄 아시고 조심조심하시고 몸을 제일 보호하세요.” (1973년 1월 5일)

“가능하면 당신을 경호하는 몇 사람과 늘 같이 다니도록 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후원하는 분들과 조직되어서 움직이면 더욱 힘 될 줄 믿습니다.” (2월 20일)

“이 국장(중앙정보부 6국장) 말이 동백림 사건도 자기가 그들 스스로 오게 만들었대요. 귀국하면 생명이 위협하다는 등 말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있어도 만일에 생명을 자기들이 노린다 가정한다면 감쪽같이 없앨 수 있다고 했어요.” (5월 15일)

“현재 한국의 정치인은 당신 한 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수록 당신의 책임은 더욱 중하고 당신의 몸은 귀중하니까 늘 몸을 지키세요.” (6월 20일)

“저들이 당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외국에서의 인정이 굳어질수록 당신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 화살을 보낼 터이니 더욱 더 조심하세요.” (7월 8일)

이렇듯 끊임없이 위협을 당했고,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재일 한국인 야쿠지들이 김대중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로 미루어 김대중을 위해하려는 움직임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의 살해공작이 미수에 그쳤기에 김대중은 살해당할 위험이 줄어들었다. 모든 국내외 관심이 김대중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공작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는 발제자께서는 1971년 4월부터 1972년 10월까지 김대중 동향 내사가 1100건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김대중을 살해를 암시하는 문건도 존재했는지 알고 싶다.

토론문2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관계

길윤형

한겨레 국제부장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남북 화해 협력의 밑돌을 놓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탈냉전 시기 한-일 협력의 방향성을 설정한 1998년 10월 한-일 파트너십 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냉전의 해체라는 거대한 시대사적 흐름을 받아들여 한-일이 양국 관계의 나아갈 바를 재정의한 것이었습니다. 선언은 민주화되고 성장한 한국(“오부치 총리는 한국이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과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헌법을 소중히 하는 일본(“김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수행해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이 서로를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선언을 떠받치는 두개의 큰 기둥은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확립된 일본의 반성적 역사인식과 평화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어느 하루 갑자기 땅에서 특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이 선언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명확히 각인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김대중 납치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패전으로 한반도에서 물러난 일본은 그로부터 20년 뒤인 1965년 대한민국과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 사회에게 한국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먼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한-일이 국교를 정상화하던 무렵인 1965년엔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협정 체결 뒤엔 빠르게 관심이 베트남 반전운동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선 진보적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지식인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것은 한일협정의 군사적·국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 조약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동북아시아조약기구(NEATO)로 가는 첫걸음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시민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을 1972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해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언한 해이자, 때마침 1년 전 국회의원 선거유세 과정에서 당한 석연찮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일본에 머물던 김대중이 유신반대 성명을 내놓고 망명

을 택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명관 전 한림대 석좌교수가 유신이 발생한 직후 일본에 건너가 도쿄의 기독교인 네트워크에 합세하게 됩니다. 지명관은 1973년 5월호부터 일본 진보진영의 여론을 주도하던 월간지 〈세카이〉에 ‘티케이(TK) 생’이란 필명으로 칼럼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15년 동안 연재하게 됩니다. 이 연재물을 통해 일본인들은 비로소 한국 내 민주화 운동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망명한 김대중 역시 일본 정계에서 조금씩 얼굴을 알려줍니다. 이 시기 김대중과 연을 맺은 대표적인 정치인들로 자민당 내에서 가장 리버럴한 정치인으로 꼽히던 우쓰노미야 도쿠마宇都宮徳間, 고노담화의 주인공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사회당의 덴 히데오田英夫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전체의 관심은 여전히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던 1973년 8월 8일 김대중이 흰한 대낮 도쿄 중심부 호텔인 그랜드팔레스에서 납치 당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납치 현장을 목격한 김경인 의원은 재빨리 우쓰노미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적이 꾸민 정치적 살해 음모임을 직감한 우쓰노미야는 니카이도 스스무二階堂進 관방장관, 고토다 마사하루 後藤田正晴 관방부장관, 다카하시 미키오高橋幹夫 경찰청 장관 등에게 전화를 돌려 수사를 독려하는 등 이 사건을 신속히 공론화하게 됩니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의 서울 지부장이었던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의 회고록 〈역사의 파편〉을 보면, 김대중 납치 사실이 확인된 그와 당시 필립 하비브Philip Habib 대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자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하비브 대사는 박정희에게 “김대중 납치에 대해 알고 있으며, 김이 죽는다면 미국과 서울의 관계가 끝장날 우려가 있다”는 긴급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김대중은 납치 엿새째인 8월13일 밤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 자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리며 투쟁하는 한국인들의 투쟁에 비로소 눈 뜨기 시작한 일본인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김대중이 납치된 당일인 8월8일은 김대중과 야스에 료스케安江良介 편집장의 대담인 ‘한국 민주화의 길’이 실린 〈세카이〉 9월호가 시중에 발매된 날이기도 했습니다.(김대중은 이날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기무라 도시오木村俊夫와 약속이 예정돼 있기도 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이 대담을 통해 일본인들은 수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한국 정치인의 목소리를 비로소 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놀란 일본 시민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사건 발생 후 2주 정도 지난 8월23일부터였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 78명은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면서 ①일본 경찰은 김대중 씨 납치 경과를 명확히 밝힐 것 ②일본 정부는 한국 중앙정보부의 일본

내 활동을 용납하지 말 것 ③한국 정부는 김대중 씨와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 ④한일 정부는 김대중 씨를 속히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배려할 것 등의 4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게 됩니다. 이 서명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김대중씨를 구하는 모임’이 결성됐고, 이는 이듬해 4월 ‘일본의 대 한국정책을 바로잡고 한국 민주화 투쟁과 연대하는 일본 연락회의’ 결성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국회에선 김대중이 일본에 체류하던 무렵 깊은 신뢰를 쌓았던 일본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추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 한-일 관계를 규정한 기본 조건은 ‘냉전’이었습니다. 살벌한 냉전 질서는 양국에 협력을 강제했습니다. 두 나라는 역사 문제를 봉인하고 경제 협력의 길을 연. 이른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한국은 공산권의 위협에서 일본을 방어하는 일종의 ‘방파제’ 구실을 수행했고, 일본은 그런 한국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라는 경제협력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하며 뒤를 받쳤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장을 지내게 되는 나다오 히로키치灘尾広吉는 1977년 6월 휴전선 근처전방부대를 방문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38선을 지켜주고 있어 오늘의 일본이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흥미로운 일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뜻미지근하기만 했습니다. 9월5일 납치 현장에서 한국 대사관 일등서기관인 중앙정보부 요원 김동운의 지문이 검출된 뒤에도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총리는 9월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내외적으로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은 익히 말씀 드린 바와 같다”면서도 “정부는 한국과 우호관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기본정책은 바꿀 뜻이 없다”는 인식을 밝힙니다. 이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양국 관계를 좌지우지했던 여러 ‘흑막’들의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결국 김용식 외무장관은 11월1일 “김대중 납치사건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외교적 충돌이 마무리 됐다”는 말과 함께 ①김동운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받는다 ②향후 김대중이 국외에서 한 언행에 대해선 반국가적 언행이 아닌 한 추궁하지 않는다 ③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찾아 직접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한다는 양국 간의 절충 결과를 소개합니다.

박정희의 친서를 든 김종필의 방일은 다음날 이뤄졌습니다. 김종필과 다나카의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32년의 세월이 흐른 2006년 2월입니다. 한국 정부는 1만7쪽에 이르는 1952~1974년 외교문서 191건을 공개합니다. 그 가운데 이 둘의 대화 내용이 담긴 13쪽 짜리 회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찾은 이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 출신 후루노 요시마사古野喜政입니다.

다나카 | 수사는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계속해야 한다. 수사가 추진돼 김동운의 행위에 공권력 개입 사실이 판명될 경우 새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동운에 대한 수사는 그의 체포 및 기소 등을 포함한다.

김종필 | 지금 하신 말씀은 이 말대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다테마에'(겉으로 하는 말)입니까.

다나카 | 다테마에입니다.

김종필 | 방금 하신 말씀은 새 내용이 아니라 다테마에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나카 | 저와 오히라 외무대신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기본정책을 변경해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략) 그는 일본에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일본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 일본 쪽 수사본부는 어떻게 하실 셈입니까.

다나카 | 수사본부는 서서히 해산시킬 겁니다. 당장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당분간은 적당히 놔둘 생각입니다. 이쪽도 최대한 신경 쓰고 있으니 믿어 주십시오.

(중략)

김종필 | 우리 대통령님도 일본 정부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대국회 대응을 하는데 당신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김대중 사건은 완전히 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나카 | 다 끝난 얘기를 자주 하는 것도 무의미하니 이제 이 문제는 '파'(골프의 파)로 합시다. 나도 입장을 분명히 정했으니깐요.

김종필 | 그건 이 전에 출신원을 하셔서 거기서 자신감을 갖고 태도를 정하신 겁니까(다나카 총리는 8월17일 하코네 센코쿠 골프 클럽에서 출신원을 했다)

다나카 | 출신원은 우연이지만, 이건 진심입니다.

한일 당국 사이의 이 야합을 둘러싸고 여러 소문이 이어졌습니다. 한-일이 이런 더러운 거래를 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이 냉전이라는 구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전 니가타현 의회 의원을 맡았던 기무라 히로야스木村博康는 그해 2월 일본 월간지 <분게이슌주>에 '나는 보았다 다나카 가쿠에이 4억엔 수령현장'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기무라는 1973년 10월 이병희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다나카 총리의 자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현금 4억엔을 건네는 현장에 입회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희는 김종필 총리와 육사 동기였고, 김종필의 12월2일 사죄 방문 때도 수행단으로 일본을 찾았습니다.

“필자는 지난 27년간 이 사실을 가슴속에 비밀로 간직한 채 지내왔다. 이 사실을 입 밖에 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물론, 정계를 뒤흔드는 대 스캔들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사건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필자가 스승으로 모셨던 다나카 총리를 비롯하여 이 숨겨진 드라마의 주역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필자 또한 올해로 74세가 된다. 필자는 이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야기될 파장보다도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이 어둠 속에 파묻혀 사라져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그때 납치사건을 둘러싼 한일 교섭의 키를 잘못 잡았더라면, 그 후 김대중 씨가 걸어갔을 여정은 지금과는 같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필자는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뉴스를 접하면서 하게 됐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 두 개의 종이 가방에 넣어 건네준 수억 엔, 그 무게가 2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필자의 손에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벌써 50년이 지난 당시 한-일 간 야합을 돌아보는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뒤 김대중 대통령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초석을 놓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내놓게 됩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합니다. 평화헌법과 관련해서는 오부치 총리가 “한국이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하자, 김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아래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 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행해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일본의 반성적 역사인식과 일본의 평화헌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15년 아베 담화를 통해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을 지울 수 없다고 선언했고, 지난해 12월 안보관련 3대 문서를 채택하면서 평화헌법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간의 오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 양보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 내의 상당한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지난 박정희-다나카의 야합과 같은 더러운 선택이라 일방적으로 매도하진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8일 국회연설에서 “한·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다”며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과거의 비극에만 매몰되어 있어선 곤란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를 직시하지 않게 된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한-일 관계의 ‘꺼림칙한 변곡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